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논리: 힘과 공포의 정치학\*

안 병 진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이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노선의 특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대내외 노선의 구사에 있어서 힘의 과시와 공포를 이끌어내는 전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전략의 지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이는 부시의 선제공격독트린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라크 전쟁에서 선보인 충격과 공포의 전쟁 전략과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 이 전략은 부시행정부의 국내 정치를 설명하는 데는 어떠한 유효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전략이 미 제국의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간략한 전망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 I. 서 문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아는가? 공포, 두려움, 겁주는 행동의 결과 이지. 누가 흠쳐가면 손을 잘라버리고, 대들면 혀를 잘라 버리고, 나한테 대항하면 머리를 잘라 창에 걸어 놓지. 높이 달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지. 그게 모든 것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두려움!

- 영화 갱스오브뉴욕(Gangs of New York) 중에서

2003년 여름 전개되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부시행정부는 가공할 폭력적 힘의 과시로 전 세계에게 미국의 패권을 확인시켜주었고 '충격과 공포' (shock and

---

\*이 글은 진보평론 2003년 16호에 실린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awe)라는 전쟁 전략은 후세인 뿐 아니라 이라크의 민간인들을 공포와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 전쟁을 전후로하여 전 세계는 미국의 일방적 힘의 우위하의 세계질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아직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속에 드러난 전쟁의 일관된 논리를 정리해보는 데 목적을 가진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그 동기나 명분, 그리고 전쟁의 전략과 미국 국내에의 영향등에서 일관된 논리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필자는 '힘과 공포'의 정치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힘과 공포의 정치'란 외교나 내정에서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상대의 두려움을 유발시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알려진 것은 절대군주시절 군주의 중요한 책략으로서 공포와 두려움의 통치를 강조한 탁월한 근대 정치학의 선구자인 마키아벨리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정을 이러한 '힘과 공포의 정치'의 관점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몇가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이는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전쟁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등에 대항하여 이라크 침공을 통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상 동기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과거 클린튼 민주당 행정부하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의 논리와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이라크 침공과정에서 전제한 '힘과 공포의 정치'에 기반한 선제공격독트린은 과거 클린튼 행정부 시절의 예방외교 전략에 담긴 정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전쟁 이후의 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국제 정치의 구도를 예측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결론을 미리 언급한다면 필자는 이러한 '힘과 공포의 정치'는 비록 국내외적으로 두려움을 양산해내는데 성공할 지는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패권에의 도전을 가속화시켜 미국의 패권을 침식시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 II. 전쟁의 동기: 가공할 힘의 과시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미국내 정치 평론가들 기억속에서 사라졌지만 2000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부시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노선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키워드는 '절제된'(modest) 대외관계로 집약될 수 있고 반면에 부시가 가장 알레르기를

보인 연사는 '국가건설' (nation building)이었다. 이는 클린튼 정권 시절 소말리아, 코소보, 보스니아에 미국이 인간주의적 명분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노선에 대한 강한 비판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시의 외교안보보좌관인 콘돌리사 라이스(Condoleezza Rice)나 국무부장관인 콜린 파월(Colin Powell)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신중한 외교안보 노선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부시의 외교안보 관련 발언에서 대 테러리즘 전쟁은 상대 후보인 앨 고어(Al Gore)와 달리 거의 아젠다로 제출된 적이 없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클린튼 정권의 외교안보 팀이 테러리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강조했지만 콘돌리사 라이스가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제한적 개입노선이 보여주듯이 국정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현 부시의 외교안보팀은 그의 아버지인 전부시 대통령의 팀들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은 평론가들은 평가한 바 있다.<sup>1)</sup> 물론 부시의 아버지와 항상 정치적 경쟁관계를 이뤘은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팀이지만 국정 초기 그의 주요 관심사는 이전 클린튼 행정부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집중적으로 맞추어 있었기에 콘돌리사 라이스나 콜린 파월 주도의 외교안보 팀과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노선 마찰은 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9월11일 발생한 테러가 던져준 충격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의 기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클린튼 행정부가 해온 외국에서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 작업을 경멸하던 부시 행정부의 제한적 개입주의 외교 노선은 사실상 미국 본토가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비록 클린튼 정권기간 1993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발물 사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지될 뿐 이었다. 하지만 9·11 테러는 더 이상 미국 본토가 국제 분쟁 영역의 밖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적으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된 가장 취약한 열린 체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멀게 만 느껴졌던 타국에서의 개입작업과 본토의 안보가 가지는 긴밀한 연관성은 누가 보기에든 분명해진 셈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선거기간과 취임 초기 취해온 제한적 개입주의 레

1) Herberstam, D., *War In A Time Of Peac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1, pp. 493-494.

토릭을 철회하고 폴 울포위츠(Paul D. Wolfowitz)나 리차드 펄(Richard Perle), 존 볼튼(John Bolton)같이 1980년 레이건 집권 초기의 신보수주의 경향의 군사 개입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인 콜린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을 누르고 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sup>2)</sup> 울포위츠가 반농조로 자신이 자리를 수락한 것은 파월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9·11 테러 이후 그는 단지 감시에서 나아가 외교노선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끔 된 셈이다.<sup>3)</sup> 이러한 80년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공화당 내 일부 흐름으로 남아있는 군사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우월한 도덕적 가치와 소명이라는 것발하에 군사주의적 방식을 불사해서라도 대외관계에 공세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유일무이한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기본적 노선으로 한다. 이들은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서서히 힘을 키우면서 봉쇄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당시 소련 제국이 성장하기전에 예방적 군사공격을 감행하자는 모험주의적 군사전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심지어 신보수주의적 레이건 대통령조차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모험주의적 외교노선이였고 이후 보다 현실주의적인 외교안보노선을 추구했던 부시 행정부하에서 이들의 발언권은 전면적으로 등장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편으로 걸프전에서 후세인 정권교체의 목표로 나아가지 않은 부시의 소심함을 비판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New American Century)라는 단체를 통해 꾸준히 이념적 결속을 모색해왔다. 9·11 테러는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21세기에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백악관 취재기가 책 전반에 걸쳐 잘 묘사하고 있듯이 울포위츠등의 신보수주의자들은 9·11 테러 초반기부터 이라크 공격을 줄곧 주창해 왔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힘과 공포의 정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정치사상가인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sup>4)</sup> 그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히틀러의 박해

2) 이에 대해서는 Woodward, B., *Bush At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02 참조.

3) *The New York Times Magazine*, 01/11/25, p.65.

4) 아래의 레오 스트라우스의 논의는 안병진,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3년 겨울호(미간)에 상당부분 근거한다.

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여 잠시 뉴스쿨포소셜리서치 대학에 머물다가 이후 보다 보수적인 시카고 대학에서 머물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등의 고전 철학을 재해석하여 소위 스트라우스 학파를 만들어내었다. 비록 그는 거의 정치현실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보수주의자임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그를 정점으로 하여 그와 사상적으로 교류하며 제한적 핵전쟁 논리를 발전시킨 알버트 웰스테터(Albert Wohlstetter), 제자인 앨런 블룸(Alan Bloom)은 이후 어빙 크리스톨, 윌리엄 크리스톨등이 여러차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사상과 국내의 정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 홉스등의 전통을 이어받은 근대주의 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가치관의 다원주의, 쾌락, 인간의 개체성보다는 절대적 도덕관, 이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고대적인 사상가이다. 하지만 힘과 공포에 대한 논리의 측면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강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홉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레오 스트라우스는 통치자의 힘과 공포의 정치를 강조한다. 그는 또한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군주의 책략을 합리화한 마키아벨리 사상을 사악하다며 적대감을 표시한 바 있지만 이탈리아 절대군주 시기의 혼란기에서 군주의 냉혹한 통치술을 강조했던 마키아벨리처럼 그는 외부의 위협이 없으면 이를 만들어내서라도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담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비서구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군사력을 두려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와 지속적으로 사상적 교류를 나눈 웰스테터는 이러한 힘의 관점에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인위적 핵균형보다는 제한 핵전쟁을 옹호해왔다. 이후 스트라우스와 웰스테터의 관점은 신보수주의의 핵심들에게 계승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저명한 신보수주의자인 노만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9·11 테러는 미국의 힘에 대한 경멸의 산물이며 미국이 오랫동안 테러리스트에 대해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전적인 이슬람에게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라크 침공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힘과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시연장이었다.

흔히 영국의 비비시 방송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 매체와 좌파 지식인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주요 동기로서 이라크가 미국의 석유 공급의 주요한 요충지대이다

는 점과 부시 행정부 인사들과 석유자본들과의 연계성을 지적해왔다.<sup>5)</sup> 사실 현재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석유소비량이 많은 SUV 차량의 보유량이 세계 최고라는 지표에서 보여지듯이 저렴한 석유자원 공급에 사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쟁의 주요 동기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난점이 있다. 비록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정도로 기존의 석유 공급 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있어 온 것은 아니다. 또한 덩 체니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비록 부시 행정부의 참여 인사들의 배경이 석유자본과 인맥에 있어 친화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들이 개별 석유자본들에 포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들이 장기적 에너지원 안정적 확보나 경제불황 돌파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엄청난 위험요소와 비용이 예상되는 이라크 침공을 석유 때문에 결정했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백승욱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이라크의 점령으로 인해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수입의 증대보다는 소수 미국인 자본가들의 수중에 부가 집중됨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sup>6)</sup>

오히려 이러한 경제주의적인 해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신보수주의진영의 힘에 대한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세계재편의 구상이 부시 행정부내에서 관철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사실 신보수주의의 정치세력은 경제주의적 맑스주의와는 정반대로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경제적 요인보다 신념이나 비전을 특별히 중시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1997년 이들이 결성한 '새로운 미

5) 예를 들어 이장훈씨는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에서 부시 행정부와 석유자본과의 인적인 연계망을 나열하며 “이처럼 석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이 의도적으로 석유를 외면하는 측면에는(석유자본과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석유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훈, 2003, 미래M&B, 171쪽 참조.

6) 백승욱, “신보수파 주도 하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3년 겨울호(미간), 14쪽.

7) 신보수주의의 핵심 특질로 이러한 문화적 결정론으로 보고 있는 저서로는 Mark Gerson, *The Neoconservative Vision: From the cold war to the culture wars*, New York: Madison Books, 1997을 참조.

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PNAC: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등이 고민해온 세계재편의 비전은 석유라는 협소한 목표로 이해되기에는 보다 원대하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라크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라크에의 침공을 매개로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여 미국의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을 위협하고 중동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유일무이한 세계질서의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보여진다. 이라크 침공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기술적 고리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침공의 알리바이로 등장한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때문에 침공하였다기 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이의 부재와 이라크의 약함이 이들로 하여금 쉽게 침공의 유혹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석유는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세계체제의 재편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전리품의 성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 III. 전쟁의 명분: 예방적 독트린<sup>8)</sup>

이렇듯 힘의 우위의 과시를 통한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의 동기는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제공격독트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2002년 9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선제공격독트린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글의 서두는 그들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전지구적으로 전례없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의 원칙과 자유로운 사회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위치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와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 이 나라의 위대한 힘은 자유를 선호하는 힘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이것은 또한 미국을 위한 기회이다. 우리는 이 영향력의 계기를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세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sup>9)</sup>

8) 이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3년 5월 23일 발표된 안병진의 맑스 코뮤날레 컨퍼런스 발표문, "9·11 테러와 미국 국내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예방개념을 중심으로" 참조.

9)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위의 미국의 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선언에 이어 이 문서는 구체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의 최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고 선언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국민들과 본토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은 과거 소위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에 대한 예방적 선제 공격을 주장한 바 있다. 과거 냉전 시절에도 이러한 주장은 일부 전쟁광들의 무모한 주장으로 간주되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역사의 종언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 공격이 미국의 공식적 안보 전략으로 채택되고 이라크 전쟁에서 실행까지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힘에 대한 자신감에 입각한 예방적 전쟁의 논리가 위의 스트라우스의 관점에서 언급한 홉스적 세계관이라면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강조한 예방적 외교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칸트적인 영구평화체제 지향과 맥이 닿아 있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는 소말리아 개입과정등의 경험을 통해 사후적인 군사적 개입의 비효율성과 예방적 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인터칼리지 리뷰(Intercollege Review) 2002년 봄호에서 하비 시서만(Harvey Sicherman)이 밝히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개입은 이미 재난이 발생해야만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한번 이러한 위기를 겪고나면 이후 개입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sup>10)</sup> 이러한 견지에서 외교정책 관련자들의 새로운 외교노선에 대한 고민이 예방을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실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올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 개입에서) 오류는 더 거시적인 결과와 특히 앞을 미리 예견해서 사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sup>11)</sup> 1990년 후반부터 카네기 재단에서 주도하여 사이러스 반스(Cyrus Vance) 등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참여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평가한 연구 리포트인 ‘치명적인 갈등 예방’(Preventing Deadly Conflicts)도 위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이며 이후의 방향을 예방적 개입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이후 2000년 대선에서 고어의 ‘전진적

---

2000, p. 1.

10) Harvey Sicherman, “The Revival of Geopolitics”, *The Intercollegiate Review* (Spring), Vol. 37 No. 2, p. 16-23.

11) *Ibid.*, p. 67.



개입' (forward engagement) 정책으로 발전된다. 고어는 2000년 대선 초반기 4월 30일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내가 1월 유엔 안보회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안보 아젠다가 놓여 있다. 이 아젠다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경계선을 초월하는 것이며 과거의 도전 과제들만큼이나 중차대한 것들이다. 오늘날 21세기의 여명앞에서 우리는 고전적 안보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과제들 또한 인식해야 한다. … 우리는 사전 개입정책을 통해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문제의 원천에 가깝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들 문제가 출현하자마자 이 위협에 대처할 무력과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고어의 이러한 예방적 외교는 군사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반면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선제공격 독트린은 비슷하게 위기가 자라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과거 레이건 시절 신보수주의자들의 미국의 힘의 과신에 기반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재포장에 가깝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이 명분으로 등장하는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군사적 제재를 선호할 뿐 아니라 악의 제국에 대항하는 선한 세력의 도덕적 의무감을 강조하는 극단적 이분법의 경향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적극적 군사 개입주의 노선 주창자들이 테러 분쟁에 대응하여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전 세계를 테러와 반테러의 양 집단으로 새롭게 경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모든 국가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분쟁에서 중립이란 없다. 만약 어떤 국가든지간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불법자들을 지원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불법자이며 살인자인 것이다” 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sup>12)</sup> 이러한 경계 설정의 한 의도된 효과는 테러 근원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인 이라크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국제적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2001년 1월 29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부

12) The New York Times, 01/10/08, p. B6.

시가 밝힌 '악의 축' (axis of evil) 발언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을 통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테러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내부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정부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의회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속적 테러전쟁의 이유를 제공해야 할 전술적 필요가 절박했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한 공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악의 축' 발언은 그 의도와 달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 2002년 2월 24일자 의견란에서 마크 릴라(Mark Lilla) 교수는 이러한 발언이 냉전 시절 예측이 가능한 소비에트 제국처럼 일관된 축을 형성한다기보다 각기 개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sup>13)</sup>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부시 행정부의 국제 외교노선의 근본적 결함을 비판하였다.

... 우리는 미국 정책의 원칙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아군과 적이 하루 사이에 바뀌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거나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상대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볼 때 6월 중순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독트린인 선제 공격 독트린은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새로이 확보할 뿐 아니라 일관된 국제외교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알려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암살과 이라크 정권 전복 지시는 이 새로운 독트린이 어디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지를 시사하게 해준다. 또한 부시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기정사실화에 앞섰다. 예를 들어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6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19개국 국방장관 연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방어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주창하며 "확고한 증거가 행동하는 데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 한 테러범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수법이나 사용해 공격할 수 있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14)</sup>

13) The New York Times, 02/02/24, p. 13.

부시의 이러한 새로운 독트린은 어떤 점에서는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밝힌 의지의 외교노선으로의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시는 이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나는 위협이 자라는 동안 기다리지만 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오랜 시간과 9·11 테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서야 비로소 부시 행정부도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의 성격을 인지하기 시작한 셈이다. 다시 말해 이제 부시도 21세기 국제 환경에서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의 문제가 곧 뉴욕 시의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 IV. 전쟁의 전략: 충격과 공포

이 섹션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선보인 미국의 전쟁 전략을 살펴보며 그 정치적인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라크 전쟁의 과정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회자된 개념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는 전쟁 전략일 것이다. 이 전쟁 전략은 전쟁 초반기에 대규모 공격을 통해 적의 반격의지를 꺾어 조기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압도적 힘의 과시로 잠재적 경쟁자들의 대항 의지를 꺾고자 하는 부시의 예방적 독트린의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서 이념적 뿌리로 언급했던 레오 스트라우스의 ‘힘과 공포의 정치학’으로 이어진다. 사실 영국의 비비시 방송에 따르면 3월 21일과 22일 단 이틀 사이에 무려 1000기 이상의 미사일과 폭탄과 쏟아부었고 특히 1991년 걸프전때 이라크 지상군에게 공포를 주었던 데이커터등의 스마트폭탄등이 투하되었다고 한다.<sup>14)</sup> 그리고 전쟁 기간동안 이라크 시내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블랙아웃 폭탄으로 민간인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이 전쟁의 전략은 과거 베트남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미 공군의 공격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신보수주의의 선구자인 번햄(James Burnham)은 베트남 전쟁에서 리버럴들이 해온 단계적 공습같은 유약한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강력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술을 전환하도록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이후

14) 한겨레 02/06/18.

15) 한겨레신문, 03/03/23, 3쪽.

신보수주의자들에게 공식적인 관점으로 채택되었다.<sup>16)</sup> 이는 이제 걸프전과 이라크 침공을 거치면서 초당적 합의에 의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는 전술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이나 2차대전중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 1991년 걸프전의 초기 전면 공습등은 대상국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이 전략은 평가하며 이 교훈을 계승하고자 시도한다.<sup>17)</sup> 이러한 이 전략 탄생의 배경은 압도적 힘의 과시를 중시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이 전쟁 전략을 특히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드러내준다. 흔히 부시를 비롯하여 부시 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은 과거 클린튼 정부 시절의 “외과수술식 공습”(surgical strike)이나 “점진적 공격”을 유약한 자유주의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을 드러내 주는 상징적 예로서 즐겨 인용하며 경멸을 드러내곤 했다. 예를 들어 럽스펠드 현 국방장관은 1999년 클린튼 행정부가 세르비아를 공습하였을 때 그는 시엔엔 방송과의 회견에서 “공격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며 “점진적인 군사공격에는 항상 위협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8)</sup>

이 전쟁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지 상대 적군의 사기를 꺾는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전쟁 전략은 토마스 워드(Thomas Ward)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상대 적국의 민간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켜 정권 전복으로 나서게끔 유도하는 또 다른 목적을 깔고 있다.<sup>19)</sup> 사실 위에서 럽스펠드가 경멸을 보인 클린튼 행정부의 세르비아 공습의 경우에도 초기 공습의 전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일자 민간인 라디오 시설 및 전력 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퍼부어 전쟁 종료 즈음에는 85퍼센트의 세르비아 민간인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의 한명이며 이당시 나토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라크(Wesley Clark)는 이를 가리켜 “전기와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혼란은

16) Garry Dorrien, *The Neoconservative Mind: Politics, Culture, and the War of Ideolog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p. 61.

17) Shock &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http://www.dodccrp.org/shockch1.html> (2003년 4월 23일 출력).

18) 한겨레신문, 03/03/23, 3쪽.

19) Ward, T., “Going Downtown: Civilian Infrastructure as a Target in Air Campaign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2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Boston, August 28-September 1, 2002, p. 1.

반대세력들에 힘을 주고 (밀로세빅)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공언하였다.<sup>20)</sup>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는 아예 전쟁을 시작하기도전에 미디어를 동원해 부시행정부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쟁의 목적을 미리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기간에 보인 대규모 공습과 블랙아웃 폭탄에 의한 시내 정전, 알 자지라 미디어에 대한 고의성 충격등을 통해 전쟁의 전략을 여실히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기준을 했던 하지 않았던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는 1977년의 국제 조약에서 명시한 군사적 목표에만 공격을 한정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21)</sup>

## V. 국내 힘의 역학관계: 공포 정치

9·11 테러는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의식에도 심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는 미국 군인 몇 명의 사망에도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정부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클린튼 행정부 시절 소말리아 개입과정에서 사살된 미국 군인을 당시 군벌들이 차 뒤에 끌고 시내를 시가 행진하던 장면은 클린튼 행정부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미군 포로의 처참한 모습이나 백명이 넘는 사상자숫자는 반전 시위를 격화시키기는 하였지만 부시 행정부에게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우선은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국내에서 벌여온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작업의 결과이다. 부시는 위에서 언급한 예방적 독트린으로 영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테러 경보 및 테러를 주요 이슈로 하는 중간선거 캠페인 및 민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애국법안(Patriot Act) 등 반민주적인 아젠다 주도등을 통해 중간 선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를 유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sup>22)</sup> 또한

20) op.cit., p. 10.

21) op. cit., p. 22.

22) 테러 이슈를 국내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도한 이는 부시의 핵심 측근인 칼 로브(Karl Rove)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Dubose, L et all., *Boy Genius: Karl Rove, the Brains Behind the Remarkable Political Triumph of George W. Bush*, New York: PublicAffairs,

원래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안된 전국적 자원봉사조직의 아이디어는 현 부시 행정부하에서 2002년 1월 “미국 자유 봉사단”(USA Freedom Corps) 제안에서처럼 테러에 대한 투쟁조직의 관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마치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찰스 톨리(Charles Tilly)의 고전적 명제를 증명이나 하듯이 현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렇듯 미국의 국가를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역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가속화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보수화는 단지 부시 행정부의 성공적 전략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백승욱 교수가 지적하듯이 그간 미국 외교가 보여온 무기력함과 체제안보의 공백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식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적을 불문하고 미국의 정치세력이 장기적 비전없이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미국의 힘을 서서히 쇠퇴시키고 본토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9·11 테러를 계기로 형성된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일정한 대중적 토대를 견지한 부시의 효과적인 대국민 공포의 정치에 애국주의적 분위기에 편승한 민주당의 순응적 행태와 결합되어 이라크 전쟁후 재건 계획이 서서히 수렁에 빠지기 전까지는 제도권 정치내에 어떠한 위력있는 제어판을 만들어 내고 못하였다. 사실 어떠한 구체적 규정없이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구금할 수 있게 허용한 ‘애국법’은 한국의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마저 연상시키지만 의회내에서 단 한명의 반대로 순탄하게 통과했던 경우가 증명하듯 민주당은 상당기간 충성스러운 야당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은 부시의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애써 입장을 모호하게 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경제 실정에만 집중하다 중간선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미디어도 민주당과 함께 충성스러운 국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시 행정부의 공포의 정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특히 시엔엔과 폭스 채널은 서로 경쟁을 벌여가며 미국의 국익을 강력히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쟁의 참상이나 이라크의 입장보다는 전쟁의 스펙터클을 오락적으로 보

---

2003를 참조.

23) 백승욱, 2003, 6쪽 참조.

도하고 미군 포로의 모습이나 전사자 수를 제한된 형태로 방영한 데서 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마치 영화 웨더 독(Wag The Dog)의 전쟁 영웅 조작화를 연상시키듯이 여군 포로의 구출을 극적으로 미화하고 부상경위와 정도등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미디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쟁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미국 엔비시 방송의 유명 언론인인 애슐리 밴필드(Ashley Banfield)는 “미국의 케이블 TV 진행자들은 국기를 온 몸에 두른 애국자”라고 비꼬기도 하였다.<sup>24)</sup>

## VI. 결론: ‘힘과 공포의 정치’의 후폭풍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영화 갱즈오브뉴욕에서 야만적 두목이 권력을 유지하게 위해 잔혹한 공포 정치에 의존하는 모습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핵심을 잘 포착해준다. 사실 권력 논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통찰력을 보였던 과거 절대왕정 시절의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권력은 인민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외심을 유발시키지않는 공포는 오히려 군주에게 돌아오는 칼날임을 마키아벨리는 동시에 지적한 바 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증명이나 하듯이 점령당한 이라크의 민중들은 미군에 대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고 미군은 연일 사상자를 내며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부시의 논리를 생생히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핵무장을 재촉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 총리는 군축 협상의 재론을 거론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독자적인 안보공동체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일본에 이어 프랑스까지 자체적으로 선제공격독트린의 채택을 검토하는 등 국제질서는 흡수적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기까지 하다. 현재까지의 양상은 ‘힘과 공포의 정치’가 미국의 압도적 힘의 과시를 통한 패권의 확고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반작용을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힘과 공포’의 정치에 의한 후폭풍이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국제정치 질서를 재편할지 모든 것이 유

24) 한국일보, 03/04/28, 41쪽.

동적인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조금씩 징후를 보이는 후폭풍은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